



한전공대 입지로 선정된 나주시 빗가람동 908 일대 나주 부영CC 전경. 한전공대는 '20년내 에너지 분야 국내 최고 대학'을 목표로 오는 2022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한전공대 나주 부영CC에 들어선다

입지선정위원회 심사 92점 1위·광주 첨단 3지구 87점 2위

한전 "실시협약 체결후 기본계획"…2022년 3월 개교 목표

한국전력이 세계적인 에너지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설립하는 한전공대가 나주 부영CC에 들어선다.〈관련기사 2, 3면〉
한전공대 입지선정 공동위원회는 28일 서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열린 '한정 공대 범정부 지원위원회' 분회의에서 나주 부영CC를 한전공대 입지로 발표했다. 나주 부영CC는 나주시 빗가람동에 위치해 있으며 한전 본사로부터 2km 가량 떨어져 있다.

당초 후보지는 북구 첨단산단 3지구, 남구 에너지밸리산단, 승촌보 일대 등 광주 3곳과 나주 부영CC, 농업기술원, 산림자원연구소 등 전남 3곳으로 총 6곳이었다.

공동위는 지난 25일 6곳의 후보지를 심사해 광주 북구 첨단산단 3지구와 나주 부영CC 2곳으로 압축했으며, 이날 최종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심사 결과 부영CC가 92.12점, 첨단산단 3지구가 87.88점을 받았다. 공동위는 부영CC가 주요 항목심사 결과 부지 조건, 경제성, 지자체 지원계획, 개발규제 항목에서 골고루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첨단산단 3 지구는 산학연 연계, 정주환경 및 접근성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지자체 지원계획과 경제성 등 다른 항목에서는 부영CC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입지선정 공동위원장(국외)인 버카드 라우트 독일 기술대 교수는 "각 위원회는 국내외 대학과 연구소의 전문가 1300명 이상이 포함된 풀에서 선정했고 출생지나 학연, 부동산 보유 등 광주·전남과 이해관계가 있는 후보를 철저히 배제했다"며 "심사 과정이 광주와 전남에 모두 공정했음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한전은 향후 부영CC를 추천한 나주시가 제안한 내용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부지조성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해결과 캠퍼스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동위 관계자는 "후보지 심사결과는 객관적이며 공정한 절차로 비교심사를 실시해 우선 순위를 결정한 것"이라며 "1순위 해당 지자체에서 제안한 내용을 이행협약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면 순위가 변동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이 지난해 9월 공개한 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한전공대는 학생 1000명, 교수 100명, 부지 120만㎡ 규모로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에너지 분야에서는 20년 내 국내 최고, 30년 내 5000명 대학 클러스터 규모의 세계 최고 공대를 실현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부지는 선정했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당장 비용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한전은 공대 설립에 약 5000억원이

필요하고, 이후 매년 운영비로 약 5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은 작년 1~3분기 4318억원 순손실을 기록했다.

한전은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지원은 확정되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내 대학 정원이 남아돌고 한전 재정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공대 설립을 반대하기도 했다. 또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일부 주주들이 반대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주 AI 창업단지·전남 남해안 관광벨트

예타 면제 사업 포함 유력

정부 오늘 대상사업 발표

30조원 이하로 줄어든 듯

정부가 29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사업 심사 결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서 어떤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까지 광주·전남 3개를 비롯,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33개 사업에 대해 예타면제를 신청했으며 총사업비는 61조 원 규모다.

광주는 1순위로 '인공지능(AI) 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 조성'과 2순위로 '광융합산업 혁신 플랫폼 구축' 등 2개 사업을 신청했다. 전남은 예타 면제 사업으로 남해안 신성장관광벨트 사업을 신청했다. 이런 가운데 광주는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 사업 그리고 전남은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 사업 과제가 일부 조정되면서 전체 사업 규모는 일정 정도 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의 규모가 애초 예상했던 최대 42조 원 규모에서 30조 원 이하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전남의 남해안 신성장관광

벨트 사업 규모가 상당 부분 조정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정치권에서는 예타 면제 사업이 경제성이 불투명하다는 사업 신청 규모가 60조 원에 이르러 예산 낭비와 총선 선심성 정책, 토건 경기 진작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 규모가 이명박 정부에서 단일 규모로는 가장 큰 예타 면제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의 22조 원보다 2~3배나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선심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 대상과 규모가 최종 결정되며, 수도권을 제외한 1개 광역 시·도에서 1개 예타 면제 사업이 발표될 것으로 안다"며 "광주·전남지역 예타 면제사업은 당초대로 1개씩 배정될 것이지만 전체 사업 규모는 일부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예타 면제 여부도 관심사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예타 면제가 현실화된다면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과 미래 상용차 산업,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을 신청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신임 광주지방법원장에 박병철 부장판사

대법 고위법관 정기인사

신임 광주지방법원장에 박병철(62·사법연수원 17기·사진)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임기는 다음 달 14일부터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고위법관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고위법관 인사는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두 번째다.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는 김창보(60·14기) 법원행정처 차장이, 새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는 김인겸(56·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사법연수원장으로는 김문석(60·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구고법원장으로는 조영철(60·15기) 서울고법 부장



판사가, 부산고법원장으로는 이강원(59·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보임됐다. 윤성원(56·17기) 광주지법 원장은 인천지법

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번 인사에서 최인규(54·23기)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수석부장판사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나주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전남대 법학과를 졸업한 박병철 신임 광주지법원장은 1988년 광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광주고법 부장판사, 광주지법·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NEW

한울 달빛유자 수면팩

잘 가, 피부 피로
잘 자, 내 피부

고흥 유자 6개를 고스란히 담아 유자비타민C 콤플렉스™의 항산화력으로
피부피로를 싸악 풀어 다음 날, 생기 가득 환한 피부

한울 韓律